

# EU, 동물복지정책 개요

유 찬 희\*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에 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열린 2차 협상 과정에서 EU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 개념의 인정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EU에서는 일반화된 기준이고, 또한 칠레,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개관한다.

## 1. EU의 동물복지 중시배경

### 1.1. 동물복지의 정의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시발점은 가축이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사육, 수송, 도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른바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s)’는 이상적인 동물복지의 기본 조건으로 널리 정의되고 있으며 EU의 관련 정책은 이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다섯 가지 자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rhew@krei.re.kr 02-3299-4232

유'는 다음과 같다.

- (1)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먹거리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 공간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3)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상처나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속한 치료를 해야 한다.
- (4)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고, 같은 부류의 가축과 같이 사육해야 한다.
- (5)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2. 동물복지의 중요성: 소비자들의 여론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가장 큰 근거는, 적정 수준 이상의 동물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 번식, 생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복지정책을 통해서 가축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 EU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동물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면역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소비자들은 가축에 대한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처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EU 차원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캠페인, 공공기관과 시민의 대화 등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EU 차원에서 실시한 모든 동물복지 정책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 (1) 한 예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62%가 보다 동물복지에 신경을 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sup>1)</sup> 뿐만 아니라 43%의 응답자는 육류 구매 시 항상 동물복지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 (2) 또한 유럽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1)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Eurobarometer Survey(2007. 3.)

소비자의 74%는 구매 결정을 통해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을 하였다.

대다수 EU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에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표식이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회조사에 응한 소비자 중 39%가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기를 원했고, 35%는 로고 형태, 26%는 포장에 등급이나 별 표시를 하는 형태를 원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와 식품 품질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50%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환경에서 자란 가축의 육질 더 좋다고 믿고 있다.

9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EU 내부에 적용되는 동물복지 기준이 수입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1.3. 동물복지의 경제적 함의

축산 및 가공업은 EU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2006년 EU의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과 제품의 가치는 1,300억 유로에 이른다. 동물복지는 이러한 축산 행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농촌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동농업정책 하에서는 동물복지 기준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최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유지하려면 생산과 수송비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닭을 밀집형 우리가 아닌 개방형 양계사에서 키울 경우 달걀 하나당 추가 비용은 1.3유로 센트(약 15원)이고, 방목을 할 경우에는 약 2.6유로 센트(26원)이다.

동물복지 기준 도입으로 사육비용이 높아지더라도 발병률이 낮아지므로 실질적인 생산비용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생산량 증가와 품질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전체 비용 대비 최대 17%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전염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고 한다.

보다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많은 유럽 소매상들은 동물복지를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수요처럼) 동물복지 방식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1.4. EU 차원 활동의 필요성

동물복지는 EU 회원국과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 사이의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EU가 27개 국가의 연합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에 더해 동물복지는 윤리·과학·경제·정치 등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통합된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다.

EU 차원의 대응은 과학적 지식을 집적하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치적 결정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의 공통분모를 형성함에 있어 EU는 세계 다른 지역들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 2. EU의 대응 방향

### 2.1. 가축에 대한 EU의 복지 기준

동물복지 기준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가축 보호 및 후생 조약 의정서(Protocol to the EC Treaty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에서였고 이 조약은 1999

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생산에서 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육 단계: 사육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제정하였고, 산란계, 소, 돼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모든 배터리식 장(battery cage)<sup>2)</sup>을 금지하도록 했다. 산란계는 한 마리당 최소 750cm<sup>2</sup>의 사육 면적을 보장해야 한다. 소규모 사육장은 최소 550cm<sup>2</sup>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이 규모 사육시설은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 (2) 수송 단계: 2007년 1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규정은 운전자들도 동물복지를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 새 수송 차량에 대해서 8시간 이상 수송을 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위성추적장치를 이용하여 수송과 중간 휴식 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Regulation (EC) No. 1/2005). 이러한 규제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수송 차량에 의무화된다.
- (3) 도축 단계: 적절한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도축 전 전기로 기절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 (4) 개와 고양이 가죽 추방: 2006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개와 고양이 가죽의 수출,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제안을 채택하였다.
- (5) 임상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자 할 경우 EU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2. 동물복지 기준의 확대

더 나은 동물복지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EU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EU는 가능한 한 동물복지를 양자간 수의 협약(bilateral veterinary agreements)에도 적용하고자 한다. 칠레, 캐나다와 맺은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가 좋은 예이다.

---

2) 작은 철조망으로 된 우리로 여러 층으로 쌓아올려져 있고, 큰 창고에 열을 지어 서 있는 형태임.

또한 전 세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EU가 마련한 동물복지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도 무역관련 기술 지원(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도국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와왔다.

### 3. 가축보호 및 복지계획(2006-2010)<sup>3)</sup>

이 계획은 가축보호와 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6~2010년에 걸쳐 시행된다. 주요 분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현행 가축 보호 및 복지 기준 강화
- (2) 가축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 장려
- (3) 표준화된 동물복지 지표 개발
- (4) 가축 생산자·가공업자 및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참여 증대 유도
- (5) 국제적인 협약 제정 촉구 및 지원

이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 (1) 육계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육계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안하였다.
- (2) 정보 제공: EU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및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이용한 양방향 소통 방식을 통해 동물복지 이슈를 어린이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있다.
- (3) 7<sup>th</sup> Framework Program(FP7)<sup>4)</sup>: FP7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가축 건강, 생산 및 복지를 최적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 (4) 유럽 센터(European Center): 이 센터에서는 EU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라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3) Community Action Plan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

4) 국가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공동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984년에 시작되어 2007년 현재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2013)'이 진행 중이다. 7차 프로그램에는 533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 (5) 훈련: 2006년 9월 ‘동물복지 기준’에 관한 첫 번째 국제 훈련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참고자료

[http://ec.europa.eu/food/animal/welfare/index\\_en.htm](http://ec.europa.eu/food/animal/welfare/index_en.htm) “FACTSHEET: Animal welfare  
: Ensuring the humane and responsible treatment of farmed animals” 완역